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사업 다시 수면위로

윤영일 의원 "예타 조사 필요"
이낙연 총리 "국토교통부와 상의"
정부 차원 타당성 조사 여부 주목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사업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남도가 제주지역 여론 등을 의식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중단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조사가 다시 이뤄질지 주목된다.

4일 전남도와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에 따르면 윤 의원은 최근 대정부 질문에서 해저터널 건립 추진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서울대에 의뢰한 용역 결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1~2030년)에 이 사업을 반영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작년과 올해 예산 사정이 빠듯한 것을 알면서 총리가 이것(해저터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이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이 총리는 "그 문제(예비타당성 조사)를 포함해 국토교통부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의 질의는 한동안 가라앉았던 해저터널 추진에 군불을 지핀 것이라는 해석이 전남도 안팎에서는 나온다. 목포~제주 해저터널은 목포~해남 지상 66㎞, 해남~보길도 교량 28㎞, 해저터널 73㎞ 등 총 167㎞의 철로를 건설해 목포와 제주를 잇는 사업이다. 16년간 총사업비 16조8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전남도는 폭설·강풍 등으로 마비 사태가 반복되는 제주공항의 보완책과 대안으로 고속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저터널 건설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려면 제주지역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제주2공항 건설 논란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해저터널에 대한 지지를 얻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목포~제주 해저터널 사업개요

소요시간	40분
길이	167㎞(해저터널 73㎞)
예상사업비	16조 8000억원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2011년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당시 비용 대비 편익(B/C)이 1에 훨씬 못 미쳤지만, 제주 관광객 증가로 여건이 달라져 수치가 상향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남도는 2016년 10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지난해 8월까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조사 용역을 다시 맡겼다가 제주 여론 등을 의식해 중단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는 물론 정부나 제주의 입장이 복합적으로 반영돼 의사 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SK하이닉스에서 열린 'M15' 공장 준공식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태원 SK회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정부는 지원" SK하이닉스 공장서 일자리위원회 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고용 문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도록 활력을 회복하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제8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고용 절벽'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한 뒤 일자리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뒀다"며 "그 결과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높아지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특히 민간부문에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구조 변화, 자동화·무인화, 고용 없는 성장, 자영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출구를 못 찾았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일자리위원회가 논의하는 '신산업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특별히 중요하다. 이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125조원의 투자를 통해 9만2000여개의 좋은 민간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최고 집부자 531채 소유

60대 임대사업자…부산 604채 1위
상위 보유자 10명 1인당 460채

광주에 사는 한 60대 임대사업자가 531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주택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등록한 사람은 부산에 사는 60대로 604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어난지 얼마 안된 2살 영아가 집을 소유한 경우도 있었다.

4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개인기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내 최고의 '집부자'는 부산의 60대 A씨로, 혼자서 임대주택 604채를 가지고 있었다. 임대주택 545건을 등록한 서울의 40대 B씨, 531채를 소유한 광주의 60대 C씨가 뒤를 이었다. 이들을 포함한 상위 보유자 10명의 주택만도 4599채, 1인당 평균 460채에 달한다. 특히 상위 10명 중 40대가 절반가량이었고 주소지는 지방인 경우가 많았다.

임대사업자 중 최소연령 사업자는 각각 주택 1건씩을 등록한 인천과 경기의 2세 영아였다. 최소 연령자 10명 중 6명이 서울에 살고 있었고, 3명은 경기도였다.

통상 중간 수준의 소득을 갖는 가구가 서울에서 내 집을 갖기 위해서는 9.9년이 걸리는 반면, 이들은 출생과 동시에 자기 집을 마련한 셈이다.

한편 지난 5년간 20대 임대사업자의 비율이 높게 증가했는데 2014년 748명에서 올해 7월 현재 6937명으로 9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한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무려 2260명이나 늘어났다. 10대 또한 꾸준히 증가, 올해 7월 기준 179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권장했지만 아직까지 70%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더 많은 다주택자가 적법하게 등록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양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재인·김정은·트럼프 수상 가능성 있나

노벨평화상 수상자 오늘 발표…유엔난민기구 등 후보 331명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5일 오전 11시(현지시간·한국시간 5일 오후 6시)에 발표된다.

지난 1일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2일 물리학상, 3일 화학상이 발표된 데 이어 다음 수순인 평화상을 두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상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6월 영국의 유력 도박업체 래드브록스는 노벨평화상 수상 예상 후보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1위로 예상하기도 했다. 2위는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다만 올해 평화상 후보 추천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인 지난 1월 마감한 것으로 알려져, 현실적으로 수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이 후보에 포함됐느냐'는 물음에 "전혀 모르겠다"며 "(노벨위원회 측에서) 후보 포함 여부에 대해 완전히 비밀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노벨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추정 성격의 보도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노벨위원회에 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추천인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지난 5월 미 공화당 하원의원 18명이 트럼프 대통령을 2019년 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 내년 수상자가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올해 평화상 후보는 331명으로, 1901년 첫 시상이 이뤄진 이래 두 번째로 많다. 추천 후보로는 난민 권리를 대변하는 국제기구인 유엔난민기구(UNHCR),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판하는 야권 성향 일간지인 '노바야 가제타(Novaya Gazeta)'와 고문 희생자들을 돕는 인권단체 등이 접수됐다고 노르웨이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시리아에서 활동했던 자원봉사 구조단체인 '화이트 헬멧', 콩고 내전 희생자를 도운 현지 의사 데니스 무퀘게, 이슬람국가(IS) 격퇴전에서 활약한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의 군사조직 페슈메르 등도 후보로 추천됐다.

노벨평화상은 스웨덴 발명가인 노벨의 뜻에 따라 제정돼 1901년부터 총 98차례 시상이 이뤄졌다. 작년에는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O)이 상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2000년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을 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수상한 바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